

독자권익위원 칼럼

신연범

광주신용보증재단 감사실장



오즘 장사하기 참 어렵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손님은 줄고, 재료값은 오르고, 가계문을 열어도 마음이 무겁다는 사장님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최근 국제 정세는 너무나도 불안정하다. 중동 지역의 전쟁,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세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 경제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 물류비 상승, 금리 인상 기조는 기업 활동 전반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외부 충격은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우리 지역 골목상권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고된 끝에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의 연간 폐업률은 약 22%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창업 1년 이내 폐업률은 30%에 근접하는 등 생존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명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한다. 우리 지역의 경우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내수

소상공인의 생존과 재도전

중심의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과 물가 상승, 금리 부담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타 지역보다 체감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단순한 금융 지원만으로는 지역 경제 활력 강화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은 단기적인 부담 완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변화된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올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제도전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채무종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자금 지원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재창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재기 지원을 넘어, 경쟁력 있는 사업자로의 재도약을 지원하고자 한다. 교육은 총 25시간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사전교육과 오프라인 대면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에는 금융·재무 관리, 마케팅 전략, 법률 및 노무, 세무, 빅데이터 활용 등 실제 경영에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 이후의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된다.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보증 및 자금 지원과 연계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재도전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심화교육도 제공된다. 경영성장, 채무조정, 재창업, 위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획일적인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다. 이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재도전은 곧 지역경제의 회복과 직결된다. 따라서 실패 이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제도전 교육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재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고

허미옥

광주 서구청 문화경제국장



지역경제의 근간은 거대 산업단지라 아니라, 우리 일상 가까이 있는 '골목'이다. 주민이 걷고, 소비하고, 다시 찾는 골목이 살아야 도시 전체의 경제가 건강하게 순환한다.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이러한 골목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골목을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개별 점포 지원과 단기 소비 촉진 중심의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골목상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서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골목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전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단순한 행정적 성과를 넘어, 골목상권을 '점'이 아닌 '면' 단위로 관리하고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다. 서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전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골목경제 회복과 공동체 상생경제 실현에 본격 나섰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를

단순 지원 넘어, 골목의 힘을 키워야 한다

통해 약 100일 동안 추진했다. 서구는 지난해 3월부터 상권 실태조사, 상인 의견수렴, 구체적인 상권 범위 조정 등 실무 절차를 거쳐 모든 동의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을 완성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서구 전역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으나 서구는 음식점, 병원, 카페, 주유소, 미용실, 학원 등 생활 업종 전반으로 사용 가능 범위를 넓혔다. 또 같은 해 7월부터는 매주 주요 골목형상점가를 직접 찾아 주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듣고 구정 현안을 챙기는 '구청장 골목현장 집무실'을 운영하고, 구청장실에 '골목 경제 상황실'을 설치해 골목상권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과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개별 점포 경쟁력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구조적 접근이다. 정책 효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확대와 골목페이페이백 정책은 주민의 소비를 골목으로 유도하고, 이는 매출 증가와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실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으로 소비자들은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상인들도 최근 10~20% 매출 증대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

한 소비 촉진이 아니라, 지역 상권에 대한 '이웃 경험'을 축적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제 서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2026년부터는 단기 소비 중심 정책을 넘어,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상인과 중심의 조직화와 자율상권구역 기반 구축, 공동 마케팅과 문화행사 등 상권 단위의 기획·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우리동네 골목ON'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원 사업이 아니라, 상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가깝다. 물론 모든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업종과 상권 특성에 따라 체감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단기성과에 머무는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책만이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를 만든다. 골목경제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스스로 순환하고 성장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행정 역시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그 구조를 설계하고 작동시키는 역할로 전환돼야 한다. 지금 서구의 시도는 하나의 지역 사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것인가. 골목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다.

사설

통합특별시에 '성장형 경제전략' 담아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에 기업 유입과 투자 확대, 산업 구조 전환까지 이어지는 '성장형 경제전략' 전략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지방주도 성장 중소기업 정책과제'라는 보도 자료에서 이번 통합에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성장 전략을 마련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면에서 '열악'한 지역경제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 먼저 산업구조는 2022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99.9%인 50만5개가 중소기업이다. 이중 상사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95.9%인 47만9796개다. 물론 광주에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등이 있고 전남에도 여수국가산단에 석유화학기업이 밀집해 있지만 이들 대기업은 454개(0.1%)에 불과하다. 이런 구조 탓에 종사자 역시 전체(118만4040명)의 91.8%인 108만6978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 실질적 기반이 중소기업에 편중되면서 R&D 투자가 늘어 부가치 생산성은 정체·감소하고, 수출 기반과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구 구조도 마찬가지다. 2024년 기준 광주·전남 인구는 전체 인구의 6.22%인 322만2509명이며 이중 생산가능인구는 215만8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인구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층이 지역을 등지면서 2021년 223만명, 2022년 220만8000명, 2023년 218만8000명 등 매년 감소세다. 이 때문에 청년층 비중(광주 27.1%, 전남 21.1%)은 매년 줄고 있고 고령인구(광주 17.3%, 전남 26.3%)는 증가세다. 산업을 떠날 인력 기반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소비와 경제 규모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 실제 2023년 기준 광주·전남의 1인당 민간소비는 각각 2309만여원, 2033만여원으로 전국 평균 2320만여원보다 낮았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150조원으로 전국의 6.24% 수준에 머물렀다. 한마디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비 위축, 산업 기반 취약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산업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에는 지방주도 성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도화해 지역 산업과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

광주지역 출산율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모들의 산후조리 환경은 미흡하다. 공공 산후조리원 부재로 민간시설에 의존하면서 비용 부담과 이용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광주는 가입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전년(0.70명)보다 8.8% 상승했다. 출생아 수도 6507명으로 전년보다 473명 늘었다. 하지만 산모의 산후조리 인프라는 예전 저출생 등으로 축소된 이후 그대로다. 현재 7곳의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최근 수요대비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산모들이 임신 초기부터 예약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인기 시설은 임신 12주 이전에 예약이 마감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일부는 특정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흡한 산후조리원을 구하지 못해 타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까지 떠나는 경우도 있다. 출산 이후 수요를 이처럼 민간이 떠안으면서 2주 이용료가 평균 400만원을 넘어섰고 일부는 50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전남에는 8개 시군이 공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주 이용료가 150만~180만원 수준이어서 대조적이다. 사실 광주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번 6·3 지방선거는 물론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내건 단골공약이었다. 하지만 시설 1곳을 조성하는데 70억~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연간 운영비도 10억원 안팎이 소요되는 등 비용 부담이 커 '말뚝인 공약'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공공이 일부 지원하고 관리하는 '준공공화' 전략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병행해 출산 장려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출산 이후 회복과 돌봄을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방문형 산후 돌봄 서비스, 간호사 가정 방문, 산모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취재수첩

지선 수사 주도권 변화...검·경 균형점 찾아야

임영진 사회부 차장



"이번 선거사법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최근 전남경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담긴 한 문장이다.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법 수사상황실' 설치를 알리는 내용 속에서, 향후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로 이동하게 됨을 분명히 드러낸 대목이다. 보도자료의 끝자리는 통상적인 선거 대비 조치에 가깝다. 전남경찰청은 본청과 산하 22개 경찰서에 수사상

황실을 설치하고, 선거범죄 단속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 선관위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하지만 행간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수사 구조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처리되는 이번 지방선거는, 권한 재편 이후의 모습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거사법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해 수행해 왔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1차 수사 권한이 확대된 데 이어,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까지 축소될 경우 선거범죄 대응 역시 경찰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검·경 간 미묘한 긴장감도 감지된다. 경

찰은 축적된 수사 역량과 현장 대응력을 강조하며 주도적 역할을 부각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공소 유지와 법적 통제 기능을 중심으로 영향력 유지를 모색하는 흐름이다. 관련 규정에서 보면 기간 간 정보 공유와 공조는 유지되었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본격화될수록 역할 관계는 더욱 선명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인 만큼, 수사 주체 변화에 따른 책임 소재와 협업 방식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은 불가피하지만, 주도권을 둘러싼 시차라는 향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새롭게 재편될 수사 체계의 실제 작동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전남경찰청 보도자료 속 짧은 문장 하나에도 이러한 함의가 읽힌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관 재편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앞으로 검·경 관계가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는지 주목된다.



www.GwangNam.co.kr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nam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and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